

경찰국 신설 후폭풍... 전북경찰 반발 여론 뜨겁다

“행안부 쿠데타 발언, 과한 비유”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지난 주말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전북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중

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189명의 총경이 참여했다. 전북에서도 4명의 총경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국 신설에 대한 대응방

안 등을 논의한 총경들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성토했다. “경찰국 신설은 역사적 퇴행”이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청은 이번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시키고 회의 현장에 참여한 50명을 감찰하기로 하면서 반발 여론에 불이 붙고 있다.

전북경찰 내부에서도 반발 여론이 뜨겁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서장 회

에 참여한 총경들이 관외여행 신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의견 교류를 위해 모인 것을 가지고 대기발령까지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징계 수위”라며 “서장 회의는 경찰국 신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시간이다. 회의 참여자에 대한 감찰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 앞에서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합준비위원



25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전국경찰직협의회 연합준비위원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설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서 사무국장은 이날 광주, 전북, 충남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참 어이가 없다... 경찰국 신설 시 30년전으로 퇴보 대기발령까지 내린 것은 이해 불가능한 징계 수위” 전북경찰청 앞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도

의를 쿠데타와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비유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는 “행안부가 서장회의를 12·12 쿠데타와 비교를 하더라. 참 어이가 없다”며 “경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30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독립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만약 경찰국이 신설되면 30년 전으로 퇴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청 소속 경찰관 B씨는 “회의

회 서강오 사무국장이 ‘경찰국 신설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서 사무국장은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들이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인데, 민주경찰을 위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참담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서장들이 나섰던 걸로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국은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이 어떤 형태로든 훼손 받을 수밖에 없다.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준비된 새로운 정책대안 제시”

박종덕 전 한국학원연합회장,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국가예산연구소 설립·명품교육도시 건설 등 공약 내세워

박종덕 전 한국학원 총연합회장(68)이 25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내년 4월 5일에 치러지는 전주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를 선언하고 지지자를 호소했다. 전주를 지역은 이상직 의원들이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상실, 재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박종덕 전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불합리한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준비된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합리적이며, 미래비전 있는 국회의원인 되고자 무소속으로 4월 5일 재선거에 출마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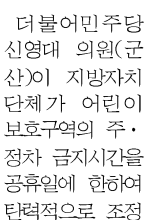


박종덕 전 연합회장은 공약으로 국가예산연구소 설립, '전주 명품교육도시건설', '조세구조 개혁을 위한 조세 입법 실현' 등을 내세웠다. '전주 명품교육도시건설'은 실질적 보육비 및 사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육열린바우처' 제도를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층에게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와 함께 학원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전북대 법대에서 학사·석사를 받고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전 새정치 민주연합 전북도당 연수교육위원장, 한국학원 총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전북대 법대 동화회장을 맡고 있다. /김경수 기자

박 전 회장은 “민주당은 이상직 의원이 비리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만큼 민주당이 당원당규 96조 2항에 따라 무공천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지켜지지 않을 시 “자신이 ‘전주시민주권연대 포럼’을 만들어 약속한 사항을 지키도록 실천운동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법상 지역과 비례의 국회의원 권한은 똑같다”며, 출마를 예견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말했다. 또한 “민약 민주당이 전주를 지역 공천을 한다고 해도 자신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며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시간 탄력 조정

민주신영대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정차 금지시간을 공휴일에 한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정차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있다. 하지만 어린이가 통학하지 않는 공휴일에도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인근 주민의 주차 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해 노상주차장도 폐지해야 한다. 보호구역 인근에 주택이나 상가가 위치한 경우 주민과 상인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보호구역의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차 문제 해소를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탄력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보호구역의 취지를 살리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일상생활 속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민주, ‘경찰국 반발’ 경찰 엄호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 당 차원 기구 격상 ‘총력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에 반대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강경 대응하는 것을 맹비난하며 경찰 엄호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경찰서장회의를 ‘부적절한 행위’로 규정하며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하는 등 징계성 인사조치를 내린 것에 과거 문재인 정권 시절 검찰 집단행동을 들어 ‘내로남불’ 프레임에 제기하기도 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회의 한 번 했다고 바로 현장 치안을 책임지는 서장을 해임하는 일이 과연 가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들의 집단 행동을 한없이 옹호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이번엔 전국 경찰서장들이 주말을 이용해 가진 회의를 놓고 온갖 겁박과 탄압으로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검찰 출신이 대통령인 정부에서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이중 잣대 등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은 원내 태스크포스(TF)인 당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을 당 차원 기구로 격상해 법률적 대응을 비롯해 국회 활동을 통해 총력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뉴스

“제로페이 실질 활용방안 고민해 달라”

도의회 농산경위, 일자리경제본부 추경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농산경계위원회(위원장 나인권)는 25일 제393회 임시회 기간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에 대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일자리 경제본부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30억5,000만원이 증액된 1,810억8,000만원이 편성됐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97억2,000만원이 증액된 3,499억2,0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산경계위원회 나인권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신규 사업과 증액 편성된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날카롭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최영열 의원(전주)은 서울 수도권 투자유치 홍보와 관련해 “본예산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점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타시도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ანი 의원(전주)은 “제로페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가맹점 수가 3만5,000개, 가맹 비율은 33%로 가맹 비율이 전국 시도로 봤을 때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면서 “고작 10% 예산지원으로 제로 페이가 활성화 될지 의문이 들며 금액의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내년도 사업에선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